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3. 25.(화) 10:00  
(지 면) 2025. 3. 25.(화) 석간

## 몽골에 주소 전문단 파견해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안착 지원

-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적용을 위한 법 개정 검토 등을 위해 몽골에서 공식 파견 요청
- 3월 24일부터 고위급 회담 및 ‘몽골주소법’ 개정 건설팅

-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(월)부터 3월 29일(토)까지 한국형 주소체계(K-주소)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주소 전문단 4명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.
-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, 초원과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 등 생활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.
- 이에, 몽골 정부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주소 개편을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,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주소정보를 관리·유통하고 있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적극 희망해 왔다.
- 이에, 행정안전부와 몽골 토지행정청은 지난해 5월 ‘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’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이후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 요청에 따라 주소 전문단(1차, 6월)을 파견했다.
- 또한, 9월 및 11월에 서울과 몽골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몽골 내각관방부 남오소르 오츠랄(Nyam-Osor UCHRAL) 장관의 몽골 주소 현대화 등을 위한 면담이 이뤄졌으며, 몽골 울란바토르시 ‘서울의 거리’에 K-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로 공포한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가 이뤄지기도 했다.
- 이번 2차 전문단 파견은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으며, 전문단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먼저 내각관방부 바야르사이한 솔롱고(Bayarsaikhan SOLONGOO) 차관과 회담에서는 한-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,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.

○ 이후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(Enkhmanlai, Anand) 청장을 만나 코이카(KOICA) 공적개발원조(ODA)를 통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800만불을 투입해 시행 예정인 ‘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’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.

○ 몽골주소법 개정\* 컨설팅은 현재 개정 준비 중인 법률 내용과 한국 도로명주소법과의 차이점과 한국 사례를 통한 주소의 부여와 관리, 활용 방향 등을 중점 검토한다.

\* 몽골 정부는 '24. 6월부터 한국의 지원을 받아 '몽골주소법' 개정안을 마련 중

○ 마지막으로 ‘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’ 지역인 수흐바타르구와 칭길테구 게르지역의 현장을 확인해 세부적인 사례별 도로명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.

□ 향후, K-주소 기반 ‘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시범사업’으로 양국에 유사한 주소체계가 구축된다면 내비게이션·항공측량과 같은 지도 분야를 비롯해 택배 등 물류업,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이 활발해져 주소정보 산업의 확대가 전망된다.

□ 한편, 행정안전부는 몽골 주소체계 진출을 기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·탄자니아의 주소 현대화 사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.

○ 또한, 한국형 주소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.

□ 김민재 차관보는 “이번 전문단 파견은 K-주소를 기반으로 양국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,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전파를 적극 추진해 우리 주소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	책임자	과 장	박희건 (044-205-3551)
		담당자	사무관	엄경철 (044-205-3546)

한-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 몽골내각관방부 차관 회담



칭길테구 게르지역 현장 점검

